

전모를 드러내는 ‘적폐 시절’ 채용 비리, 이제는 결단할 때이다!

친박 실세 청탁부터 헤드헌팅 입찰 비리까지... ‘채용 비리’ 백화점 불법·부정 합격자들의 채용을 취소하고, 책임자를 고발하라!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MBC 적폐 경영진과 그 하수인들이 2012년 파업 이후 이른바 시용기자과 경력 기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오늘자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MBC는 안광한 사장 시절인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경력기자 12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8명이 청와대나 여당을 출입하면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의 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파업에 참여하거나 정권의 방송장악에 저항하다 보도국에서 쫓겨나 유배지를 떠돌던 때였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용과 경력기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적폐 경영진과 그 하수인들이 무차별적 사상검증을 자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응시자들에게 “뿔아주면 노조 할 거냐”, “MBC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실제로 지원자 중 한 명은 실무와 인성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친노조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받아 불합격했다는 사실도 보도됐다.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모집 공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도 무더기로 합격했다. 기자 경력이 전무하거나 ‘만 2년 이상 기자경력’에 미달하는 자들이 대거 합격했고, 지원도 하지 않은 사람을 면접에 끼워넣는 방식까지 동원됐다. 특히 운영무 당시 특임국장은 자기 대학 후배에게 지원을 권하고 서류전형 평가서에 특정한 표시를 통해 ‘낙점’을 한 뒤, 자기 면접관으로 들어가 최고점을 주기까지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잇단 시용, 경력기자 채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적폐 경영진은 2014년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경력기자를 채용했는데, 이 업체의 부사장은 권재홍 당시 부사장의 동서이다. 형식적으로는 공개입찰이었지만, 사전평가 1위 업체는 탈락했고 권재홍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프리젠테이션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이 업체는 기자 12명을 뽑는 과정에서 2억 원 이상을 챙겨갔다. 더구나 헤드헌팅 업체가 인력을 접촉해 회사에 추천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측이 사전에 작성한 명단을 헤드헌팅 업체에 넘겼다고 한다. 경영진이 사전에 낙점한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세탁’을 하고 거액을 챙겨준 셈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업무방해, 입찰방해,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어떻게 공영방송 MBC에서 벌어진 것인가? 적폐 경영진의 이같은 불법 행위의 출발은 2010년 원세훈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이었다. 이 문건에는 ‘고강도 인적 쇄신’ 등 MBC를 장악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권의 계획이 적시돼있다.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등 적폐 경영진은 정보기관을 동원한 정권의 이같은 전략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온갖 비리와 편법으로 채용된 인력의 상당수가 세월호 사건, 최순실 게이트 사건 등에서 각종 편파·왜곡보도에 동원됐다. 이 불법적인 채용은 지금도 MBC의 큰 고통이자 짐으로 남아있다.

사측은 2012년 이후 파업 대체인력의 불법 채용과 채용과정에서의 각종 비위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결과를 구성원 앞에 전면 공개하라. 정치인 청탁, 내부 청탁, 지원자격 미달자 합격, 부실 검증 등 온갖 비리를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라.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들의 채용을 전면 취소하라.

아울러 이미 사법부는 6차례의 판결을 통해 2012년 MBC 파업은 적법하고 정당한 쟁의행위이며, 이 시기 채용된 인력은 불법 대체인력임을 확인했다. 이제 이들의 채용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인력 채용은 MBC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고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권력에 장악당한 MBC에서 2012년 이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채용 비리가 횡행한 사실이 전말을 드러내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부정합격자 226명을 전원 직권면직하고 이들이 불복해 소송할 경우 법원에서 다투라는 방침을 내렸다. MBC가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

어물쩍 타협하고 과거를 묻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책임자들을 사규에 의거해 엄중히 징계하라. 불법행위자들을 형사 고발하라. 불법, 부정한 합격자들의 채용을 전면 취소하라. 그것이 공영방송 MBC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2018년 8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